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장성군 김황식 前총리 생가복원 논란 ▶2
지방선거 누가 뛰나-강진·장흥군수 ▶5
광주시립예술단 연말 공연 성찬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638호 1판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음력 11월 16일)

투자하라더니… 민자유치 뒤통수 친 신안군

'흑산도 소형공항' 투자 부지 매매자금 받아놓고 국가사업 확정되자 소유권 이전 수년째 미뤄 민자업체에 패소

신안군이 민자유치를 통해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했다가 돈을 받고도 투자 기업에 약속된 부지를 이전을 해주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예산이 없어 민자 유치로 흑산도 소형공항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부가 뒤늦게 이 공항을 국가 주도사업으로 정해 예산을 지원해주자 신안군이 사실상 참여기업과의 협약을 파기해 버린 것이다.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가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근 신안군이 패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흑산도 소형공항 인근인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 30번지 일대 9만9000㎡(3만평·매각대금 3억4000만원)의 군유지를 신안군이 매입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아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신안군)의 계좌로 송금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 측은 지난 2010년 이 부지의 매입 대금을 완납했지만 신안군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신안군이 돈을 받고도 수년째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가 뒤늦게 직접 돈을 들여 공항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이 업체와 지난 2009년 3월 31일 민관공동투자방식으로 흑산도 공항을 세우겠다며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정부는 2011년 1월 5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흑산도 공항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에도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비용 등 예산 35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신안군으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돈을 들여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해 주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셈이다.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가 매입한 소형공항 부지 29만7000㎡(9만평)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차피 수용하면 그만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대시설 부지 3만평은 땅값 상승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안군이 돈을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

반면 신안군의 말만 믿고, 땅값 등 30억원을 들여 공항과 호텔 등의 건립을 위해 공항 인근 땅을 사들인 기업만 애가 타게 됐다.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 관계자는 "신안군에서 직접 찾아와 MOU를 체결했고, 군이 사유지 매입을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정부 예산이 내려오자 그동안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면서 "신안군이 최근 항소를 해 앞으로도 수개월간 법적 다툼을 계속해야 하는데, 돈만 투자해 놓고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졌고,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을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학 열정은 살아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2023편 응모 61년 사상 최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고전적인 명제는 여전히 유효했다. 삶이 버거울수록 문학적 열정이 오롯이 되살아나는 건 변함없는 진리였다.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응모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시, 소설, 동화 등 3개 부문에 2023편이 응모돼,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시작된 신춘문예 61년 역사상 최다 응모 기록을 세웠다. 〈관련기사 12면〉

이는 지난해 응모작 1430편에 비해서도 대폭 늘어난 수치로, 작금의 문학 위기라는 말을 무색케 할 만큼 문학 열기가 뜨겁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문학이 여전히 모든 문화의 텍스트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변에 수많은 문학 애호가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시 부문의 경우 모두 1585편이 응모해 가장 많았고 소설과 동화 부문 응모작은 각각 273편, 165편으로 집계됐다.

응모작들은 대부분 소소한 일상을 다루면서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각박한 세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당선작은 2014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2014년 1월 중순 열린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철도노조 파업 9일째인 17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파업 승리, 철도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한 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 노조원 700명이 "철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철도파업 최장 기록…광양항 화물 쌓여

지도부 체포영장·사무실 압수수색 노·정 정면대치…KTX 운행도 감축

철도노조 파업이 9일째 접어들면서 화물·여객열차에 이어 KTX 운행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철도 파업은 지난 2009년 11월 역대 최장기 8일간의 파업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 16일 노조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검·경은 17일 서울 용산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코레일은 장기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피로도 누적과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KTX 열차운행을 평시 대비 88%로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주~용산 KTX 운행은 44회 중 4회가 줄었다. 새마을호는 10회 중 6회가, 무궁화호는 30회 중 7회가 감축됐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열차 안전확보를 위해 추후 열차 운행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물열차도 비상이다. 파업 전 광주·전남지역 하루 평균 화물 물동량은 1만2490t이었으나 현재는 평소의 36.0%인 4500t만 운송되고 있다.

컨테이너부두터미널인 신광양항역엔 멈춰선 화물열차 때문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야적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사무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노조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맞춰 국회 앞에서 '수서 발 KTX 주식회사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 노조원 700명도 이날 광주역 앞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당 최고위 광역단체장 경선방안

일반국민 50%, 당원·대의원 50%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일반국민 50%, 대의원 및 당원 50% 비율로 실시키로 하고 예비경선제(컷오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밤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혜자 최고위원이 17일 전했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당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회가 보고한 시·도지사 후보자 경선 방법 중 제1안이었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50%, 여론조사), 전국대의원(10%), 권리당원(30%) 일반당원(10%)' 방식의 경선안을 선택했다.

혁신위가 대안으로 추가 제시했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30%), 전국대의원(20%), 권리당원(30%) 일반당원(20%)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40%), 전국대의원(20%), 권리당원(30%) 일반당원(10%) 등 두 가지 경선 방안은 제외한 것이다.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천했지만, 당시에는 당원 및 대의원 투표가 60%, 일반인 투표가 40% 비율로 반영됐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이 같은 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애초 폐지하기로 했던 예비경선제(컷오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모바일 동원 경선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투표는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보고하고 당무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